그리스 민간 채권단 손실부담 비율 상향조정 논의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그리스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을 기존의 21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.

- 2011년 7월 유로정상들은 민간 채권단에게 21%의 손실부담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리스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구조 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 비율을 50~60%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.
-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논의내용이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50%의 손실부담 비율이 적용될 경우 2020년 말까지 그리스의 GDP대비 부채규모는 120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60%로 조정될 경우에는 GDP대비 부채규모가 110%까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짐.
- 그러나 7월 합의된 바와 같이 21%의 손실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유로존으로부터 2,520억 유로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GDP대비 부채규모가 2013년 186%까지 급증한 후 2020년 152%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 이 문서에 따르면 그리스 GDP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5.5%, 3.0%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2013~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겠으나 평균 성장률은 1.3%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그리스 채권단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(IIF) 찰스 달랄라 총재는 그리스 부채 문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자발적인 합의는 유럽 경제에 심각한 전염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.

- 달랄라 IIF 총재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로존의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간 채권단이 자발적 동의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함.
- 그는 협력적 논의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방적 조치와 관련된 어떠한 접근법도 디폴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그리스 경제를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리스와 유럽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함,

- 그리스의 경제학자들은 손실부담 비율 확대가 채권자산을 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 은행들과 연금 펀드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며,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~50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.
- 한편 독일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채권단이 허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손실부담 비율은 40%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.

■ 전 ECB 부의장인 루카스 파파데모스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50% 손실부담은 그리스 부채를 20% 감축하는 효과에 그치는 반면 그리스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그리스 가계와 민간 채무자들의 손실을 통해 경제활동과 세수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함.

- UBS에 따르면 그리스의 총 공공부채는 3,500억 유로에 달하며 이중 ECB가 보유한 550억 유로와 IMF가 보유한 179억 유로 등 총 35%에 달하는 공공부채는 정치적 문제와 법적 문제로 손실부담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.
- 따라서 50% 이상의 손실부담을 적용하더라도 그리스 은행과 외국 은행 등이 보유한 부채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그리스 총 공공부채의 20% 가량을 감축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함.
- 파파데모스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은 유로정상들이 7월에 합의한 21%의 손실부담이라고 강조함.

■ 한편 그리스 정부는 부채문제 해결 방안이 2035년 만기 부채까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, 자발적인 방법에 의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 비율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힘.

- 기존에 논의된 안은 2020년 만기 국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고려대상 국채 만기를 2035년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,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 비율 확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.
- 또한 4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유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,

(Financial Times 등, 10/24)